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1년 9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분원 신설 부작용 문제, 적정 간호인력 등 의료현안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제19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일(수) 10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 영등포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회」 제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 TF팀장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 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윤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19차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추진 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계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 병상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이 밖에, 최근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의료계 관련 내용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1. 9. 1(수) 10시~11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서울 영등포구)
- 참석 대상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간호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
 - (보건약단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

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윤희 부회장

○ 주요 안건

-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안)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등

■ 진행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5'	○ 모두 말씀	보건의료정책관
10:05~11:25	80'	○ 안건 논의	참석자
11:25~11:30	5'	○ 마무리 말씀	보건의료정책관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871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2021.9.1.

II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현장의 이야기 알린다

- 2021년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활동 사례집 발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의 활동 사례집인 『2021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커넥티드 케어』를 9월 9일(목)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사례집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관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사례집에는 50개 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다.

* 환자가 퇴원할 경우 질환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건강 및 질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동네 병·의원,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 연계 및 사례 관리

** 향후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분야 등도 발간 예정

■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하며, 해당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연계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pubnet.or.kr> → 업무 지원 → 공지 사항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건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 예시 : ①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지역사회 건강 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등), ⑤감염 및 환자 안전 등

○ 지난해부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17개 시·도)과 지역(70개 중진료권*)에 단계적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시·도 안에서 인구 수(15만 명 이상), 의료 접근성 및 이용률 등 기준으로 구분

○ 현재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5개소(국립대학병원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35개소(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인천, 울산의 경우 사립대학교 병원을 공모해 지정

■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지역의 여러 정부 지정 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 원장 직속으로 설치(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공공의료본부 아래에 정부 지정 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 부서 배치·연계

○ 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의료 자원 간 연계·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필수의료 제공·연계,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관할 시·도 안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총괄 조정 역할

-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필수 의료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 협력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 권역 개소당 5.3억 원, 지역 3.7억 원 지원 중

- 보건복지부 박항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8월에 책임의료기관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개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계기로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공공의료의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등 관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21.8)

- 아울러 “아직 출범 초기인 책임의료기관 제도가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이 책임의료기관의 목적과 역할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고 기관 간 교류와 배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책임의료기관 사례집에서는 주로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을 소개하고, 앞으로는 중증응급, 감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순차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참고 1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요

- (사업 내용) 전국을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공병원 중심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 수행
- (지원 예산) 권역 기관별 530백만 원, 지역 기관별 370백만 원 사업비 등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정·운영)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 (단계적 확대 예정)

〈'21년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시도	권역	지역	시도	권역	지역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수원, 포천,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성남시의료원
부산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김천, 포항, 안동의료원, 영주, 상주적십자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인천의료원	전북	전북대병원	남원, 군산의료원
대구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광주	전남대병원	-
강원	강원대병원	원주, 속초, 영월, 삼척, 강릉의료원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목포시의료원
충북	충북대병원	충주, 청주의료원	경남	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양상부산대병원
대전	-	-	제주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충남	충남대병원	홍성, 천안, 공주, 서산의료원			
울산	울산대병원	-			

■ (사업 분야) 권역·지역 내 정부 지정 센터,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형 개발 및 사업 수행

〈 필수 의료 협력 분야〉

구분		권역	지역
퇴원 후 유지·회복	· 필수 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 건강 취약 계층 의료-보건-복지 연계 및 사례 관리 등	의무	의무
병원 전단계·치료	· 중증 응급 환자 이송·전원 협력체계 구축 · 신속한 수술·검사·치료, 진료 협력 확대 등	의무	(참여)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 감염관리 임상 교육, 중소병원 감염관리 컨설팅 · 중증도별 감염병 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등	의무	의무
예방·건강관리	· 건강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산모 등) 건강 관리 및 예방 관리 지원	선택	선택
교육·인력지원	· 지역 보건의료기관 필수 의료 임상 교육 및 인력 교류 네트워크 구축	선택	선택

참고 2 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주요 사례

■ 충남 권역 책임의료기관(충남대학교병원)

“환자 문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치료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기능 회복”
(퇴원 6개월 후 모니터링 시, 삶의 질(EQ-5D) 통증 및 불편함 항목 호전)

□ A(62, 男)씨는 발병 직전까지 전기공사 업종에 종사하다가 시야 장애, 어지럼증이 나타나 뇌경색증으로 입원하였다. 입원 시 수정랭킨척도(mRS) 5점으로 심층 평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담당 주치의 및 간호사가 각각 의료적 평가를 하고, 사회복지사가 환자 및 보호자 상담 후 사회·환경 평가를 하였다. 이후 다학제팀 회의를 통해 자택 복귀를 목표로 퇴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 담당자는 통원 치료 계획에 따라 환자가 기능이 호전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 동기 강화 교육을 수행하였다. 특히 환자 거주지 관내에 시각·시야 장애와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자원이 부족하여 인근 종합복지관에서 중도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초재활 및 단기 보행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였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 특별 교통 수단 등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장애등록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공 업체를 안내하여 퇴원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 퇴원 6개월 뒤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 및 연계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확인했으며,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시 설명하였다. 특히 통원 재활 치료를 통해 보행과 통증 및 불편함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환자 문제 유형		교육 및 케어플랜 수립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의료 · 보건	•선 자세 균형 및 고유 수용성 감각 저하, 운동실조 관찰 •양측 시야장애	의사 •보행 지시 및 보조 필요 •외래진료 환자 상태 평가 및 시각각 재활치료 실시	•(본원) 통원 재활치료
	•낙상 고위험군 •식이 •기저질환	간호사 •낙상위험 교육 실시 •연하관리 및 당뇨식이 교육 •기저질환 관리 교육	
복지	•심리·정서	사회복지사 •환자 치료 동기 강화 •장애등록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계 필요 •중도시각장애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연계 필요 •낮 시간 돌봄제공자 부재로 방문요양서비스 필요 •실내 이동 시 안전 손잡이 설치 필요 •안전 가능한 보호자 없어 통원치료 시 이동 수단 연계	제공 완료
	•일상생활		•(행정복지센터) 뇌병변 장애 등록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종합복지관) 중도시각장애인 기초재활/단기보행 교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
	•보호 및 돌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주거환경		•(민간업체) 안전 손잡이 시공 업체 정보 제공
	•이동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등록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873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21.9.9.

Ⅲ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삶,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 추진 전략 모색

-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 개최 (9.14.)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월 14일(화) 오후 1시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208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혁신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2021년 제3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선도사업 지역의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주거 지원정책의 현황 및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다.

*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

○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중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동시 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https://youtu.be/gLPXCQPurtA>)

■ 포럼은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엄기옥 군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발표*는 광주 서구·전남 순천시·전북 전주시·제주 서귀포시 4개 선도지역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선도사업 추진 현황을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사례와 성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 첫 번째 발표(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는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약자 지원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노인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지원하는 실현수단으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지원주택 지원방안으로 주택공급 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운영구조, 소득수준 확대 및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입주자 선정, 재원조달,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의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두 번째 발표(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초고령사회 대비 서비스결합 주거 모델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중심에서 주거유형을 다양화해왔던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정책 현황과 주거 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서비스 결합 주거 모형을 제시하였다.

 - 특히, 서비스 결합 주거 모형과 관련한 쟁점으로 수요자 및 돌봄주택 필요량, 서비스 및 입주비에 대한 수요자의 지불능력과 의사, 지역의 수요 및 공급을 고려한 유형 마련, 필요한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 주거 자원 활용을 위한 단계별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의 주거지원 실태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지원 방향과 과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기본요소가 될 것이며,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료, 요양, 돌봄 등 주거유지서비스의 필요성도 사회적 공감대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해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거 관련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중점과제 중 하나인 주거영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한편, 「비전포럼」은 2019년부터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전문가, 단체, 지자체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하는 공개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8735,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21.9.14.

IV

“체벌없는 긍정 양육, 함께 만들어가요.”

-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폐지를 계기로, 민·관 협력 ‘915 캠페인’ 전개 -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 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 협약, 긍정 양육 지침 등을 통해 아동 체벌 금지 인식 및 긍정 양육 문화 확산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9월 15일(수)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삭제(21.1~)

- 이번 캠페인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및 국민들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온라인 국민 다짐 캠페인’, 보건복지부-깨끗한 나라 아동학대 예방 홍보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긍정 양육 지침 제작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방법 확산 등 지속적인 대국민 인식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 지속적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전달을 위해 11월 19일(금)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915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

■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9.15~11.19)'를 실시한다.

- 9월 15일 관계부처 장관 등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또는 SNS에 다짐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이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누리집: <https://www.imaum-idaum.com/Intro>

- 이 외 아동대표(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2명 및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3개 기관·단체장*도 캠페인 누리집 및 각 기관 SNS에 다짐 사진을 게시하여 국민 다짐 캠페인에 함께할 계획이다.

* 아동계, 종교계, 복지계, 교육·보육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경제계 등 총 23개 기관·단체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hwpr>) 및 누리집 배너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참여 기관* 누리집 및 육아카페(아이러브맘, 초등맘) 배너 등을 통해서도 캠페인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으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다짐 문구 및 배경(그림 또는 사진)을 선택하여 본인의 다짐 사진을 만들고, 이를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다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 다짐 문구 및 사진 예시 〉

<p>문구</p>	<p>○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발견 시 적극 신고하겠다는 등의 다짐 메시지 △ 늘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 아이를 위한 긍정 양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등 12개 문구</p>
<p>다짐 사진</p>	<p>○ 온라인 인스타그램 작가 제작한 그림(12개)을 활용한 다짐 사진 예시</p> 

- 또한, 복지부 및 참여 기관 홍보대사(아동권리보장원 홍보대사 신애라 등) 참여를 통해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 필수 해시태그(#915캠페인 #아동학대예방국민다짐 #아이마음아이다음 #징계권폐지 #체벌금지)와 함께 다짐 사진을 공유한 캠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민 다짐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1월 19일까지 지속되며, 모든 행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 협약 체결 〉

- 한편,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는 깨끗한 나라(대표이사 최현수)와 9월 15일(수) 비대면 방식(개별 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915 캠페인’을 홍보하고, 아동 체벌 금지 인식과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 깨끗한 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한정판 미용 화장지 약 2만 4천 개를 제작하였다.
 - 우유갑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하여 홍보했던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용 화

장지 앞면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를 삽입하였다.

〈참고: 체벌 금지 인식 개선 스웨덴 사례〉

- 1979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 이후 대대적 홍보 캠페인 진행
 - ‘당신은 때리지 않고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제목의 홍보물을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배포
 - 우유갑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하여 홍보
- 이를 통해 아동 체벌 지지하는 부모 비율(65년) 53%→(’99년) 10%

- 더 나아가 미용 화장지 뒷면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그림 작가가 제작에 참여한 색칠 도안을 삽입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깨끗한나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미용 화장지〉



〈앞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

〈뒷면〉 자립준비청년 그림 작가가 제작에 참여한 색칠 도안

○ 제작된 미용 화장지 일부는 다짐 캠페인 경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직영 판매를 통해 매출액 일부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확산을 위해 캠페인 누리집을 개설(9.8)하여 각종 홍보물(홍보지,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 11월까지 공익광고 영상, 긍정 양육 지침 등도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9월 초에는 '올바른 양육법'을 담은 홍보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여 보육서비스 신청 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9월 15일 이후 어린이집은 물론 교육부·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 현장에도 '올바른 양육법'을 담은 홍보지 및 카드뉴스 등을 배포하고,
- 하반기 아동수당 관련 홍보지 제작 시에도 올바른 양육법을 함께 수록할 예정이다.

〈 긍정 양육 지침 제작 〉

■ 또한, 보건복지부는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하여 부모-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 양육 지침'을 제작 중으로 이를 통해 부모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지침은 자녀 양육 중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 등 사례 중심으로 올바른 양육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전후로 '긍정 양육 지침'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긍정 양육 지침' 상 긍정 양육 개념 및 주요 원칙(안) 〉

□ (주요 개념)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부모-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육법

□ (주요 원칙) ① 아동과 자기(부모)에 대한 이해 ②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부모 ③ 공감하는 의사소통과 일관성 있는 태도 ④ 사회가 함께 양육하기 등

- 아울러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계기로 유공자 표창, 아동학대 VR 체험 부스 설치, 유아용 교육 영상 배포 등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긍정 양육’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TV, 라디오, 온라인(유튜브, 육아카페 등) 외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열차, 주요 역사 등 옥외매체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NGO, 민간기업에서 자체 보유 매체(누리집, SNS, 전광판 등)를 통해 캠페인 광고를 전국적으로 지속·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면서
 - 정부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없더라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개입하고, 더 나아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며 아이들의 행복을 다 함께 지켜달라고 전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875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2021.9.16.

V

2020년 자살사망자 13,195명, 전년 대비 다소 감소

-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13,799명 → 2020년 13,195명(△604명, △4.4%)으로 감소
-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019년 26.9명 → 2020년 25.7명(△1.2명, △4.4%)으로 감소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 예방 강화 대책(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6.9.)” 등 차질없이 추진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망자는 1만 3,195명으로, 2019년보다 604명 감소(△4.4%)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이하 자살률)은 25.7명으로 4.4% 감소('19년 26.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의적 자해(자살) 등을 포함하여, 매년 9월경 전년도 통계를 발표(통계청)

○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자살사망자 수는 2월(2.3% 증가), 6월(2.4% 증가), 8월(2.9% 증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대부분 월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수(잠정치, 9월 공표 기준)는 7,614명으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도 약 3.2% 내외 감소(255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성별 추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남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성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 (남성) ('19년) 9,730명, 38.0명 → ('20년) 9,093명, 35.5명
 (여성) ('19년) 4,069명, 15.8명 → ('20년) 4,102명, 15.9명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0대(9.4%) 및 20대(12.8%) 등 30대 이하에서 일부 증가하였다.

- 자살률은 80대(62.6명)가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70대(38.8명), 50대(30.5명), 60대(30.1명)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자살률) 80대(62.6명) - 70대(38.8명) - 50대(30.5명) - 60대(30.1명) - 40대(29.2명) - 30대(27.1명) - 20대(21.7명) - 10대(6.5명) - 10세미만(0.1명)

■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주된 요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전년도에 비해 유명인의 자살과 모방자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에 따르면 감염병, 지진, 전쟁, 테러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긴장으로 일정 기간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 LA지진 이후 3년간 평균 자살률이 이전 3년간 평균 자살률에 비해 약 10% 감소(Shoaf et al. 2004) 동일본 대지진('11) 이후 지진 피해지역 남성의 연간 자살률은 전국 평균 자살률보다 낮게 확인(Orui et al. 2015)

- 또한, 2020년의 경우 2018년, 2019년과 달리 유명인 자살사망사건으로 인한 자살사망 증가 요인이 적었으며,

-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의 확산*으로 언론현장의 자살 보도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정착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12년 자살예방법 제정 및 '13년 자살 보도 권고 기준 개정 이후 '17년까지 일 평균 자살사망자 감소 (삼성서울병원, 2021)

■ 정부는 지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6.9.)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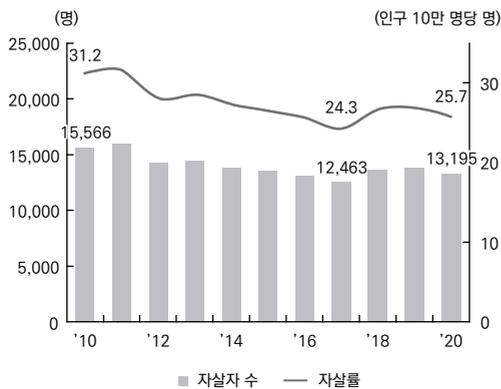
○ 코로나 우울 현상에 대응하여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한 심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 9개 부처 52개 사업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 자살예방 기반(인프라)강화를 위해 자살빈발지역과 수단,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도 확대한다.
 -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정신건강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비정신과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학생, 청소년 등 위기대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정신과 진료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권덕철 장관은 "자살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회적 문제이며,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관심이 자살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당부하며,
- "정부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기반(인프라)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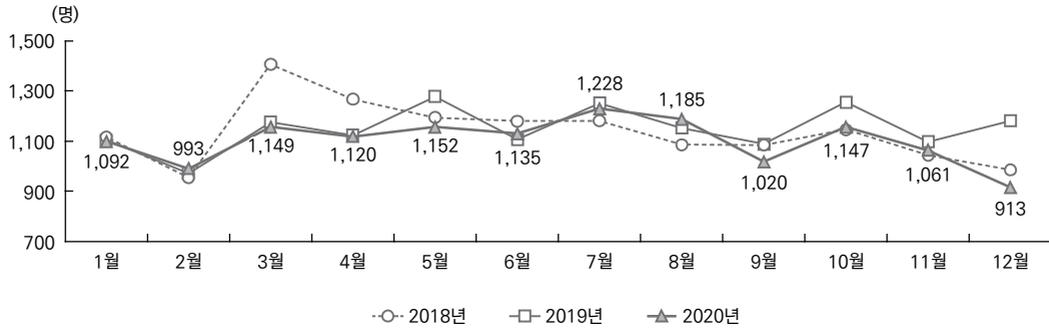
참고 자살 관련 사망통계

■ 연도별 자살사망자 수 및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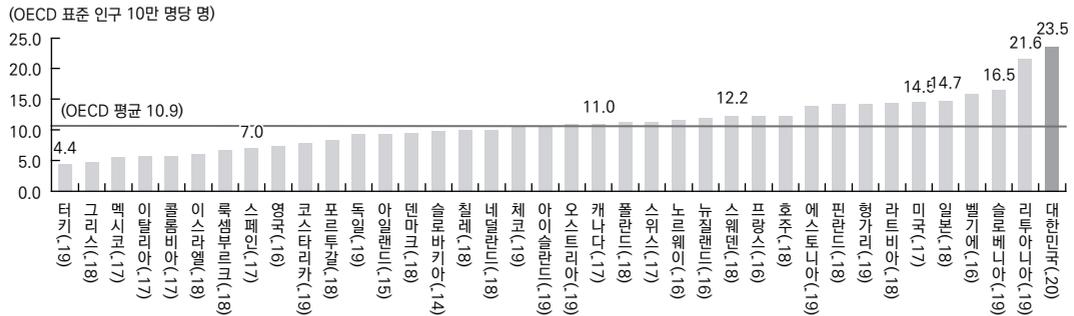


구분	자살사망자 수	자살률
2010	15,566	31.2
2011	15,906	31.7(최고치)
2012	14,160	28.1
2013	14,427	28.5
2014	13,836	27.3
2015	13,513	26.5
2016	13,092	25.6
2017	12,463	24.3
2018	13,670	26.6
2019	13,799	26.9
2020	13,195	25.7

■ 최근 3개년 월별 자살사망률



■ OECD 국가별 추이



* 자료: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21. 9. 추출)
 *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우리나라 최근 자료는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수치임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8782,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2021.9.28.